‘둑 터진’ 행정통합 추진…지방선거 셈법 복잡해진다

전남광주·대구경북은 ‘통합 선거’ 유력…후보자 간 ‘합종연횡’ 관심

선거 승패 맞물린 충남·대전 및 부산·경남…여야 주도권·프레임 전쟁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충남·대전과 부산·경남까지 통합 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당내 공천 경쟁은 물론 각 당의 지방선거 승리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곳은 광주·전남, 충남·대전,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4곳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의 텃밭인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충남·대전의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해에,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각각 별도의 행정통합 특별법을 냈다. 부산·경남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공동으로 ‘2028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되면 올 지방선거로 목표 시기를 당길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전국에서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으며 6·3 지선을 바라보는 예비·잠재 후보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들 통합 법안이 일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6·3 지선에서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는데, 후보들은 넓어진 선거 지역만큼 지지기반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선거구와 선거 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통합특별시 전역을 아우르는 선거운동이 제한된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간 ‘합종연횡’이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선 전남·광주와 대구·경북은 당과 지역 정치권이 통합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오는 6월 통합특별시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광주·전남 통합시장 예상 후보군으로는 현역인 강 시장과 김 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신정훈(나주·화순)·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정준호(광주 북구갑)·주철현(여수갑) 의원 등이 거론된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주도로 통합안이 제출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주호영·추경호·최은석·윤재옥·유영하 등 현역의원만 5명이다. 경북지사 출마 후보로는 이철우 현 지사와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거론된다.

특히 관심을 끄는 행정통합 지역은 대전·충남 및 부산·경남이다.

두 지역 모두 지방선거 전체 판의 승패와 맞물려 있어 당내 공천 경쟁을 넘어선 전략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통합 여부와 그 과정에서의 공방 및 주도권 경쟁 등에 따라 여야 간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엇갈릴 수 있다.

충남·대전의 경우 국민의힘이 행정통합 논의를 주도하다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가세하면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작년 9월 통합 법안을 냈고, 민주당은 소속 지역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한 이후 속도전에 돌입, 최근 별도 법안을 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별법을 ‘선거용’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뛰고 있다.

민주당에선 장종태(대전 서구갑)·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통합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2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특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차출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문진석(충남 천안시갑) 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 박정현 부여군수의 이름도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부산·경남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더 뚜렷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통한 조기 통합을 내세우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 지자체장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절차적 정당성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통합안에 반대하고 있다.

양 시도지사는 “원론적으로 통합은 필요하다”면서도 재정·자치 분권이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현재 부산시장 출마 후보로는 국민의힘에선 박형준 시장과 김도읍 의원, 민주당에선 전재수 의원 등이 거론된다. 경남도지사 후보로는 국민의힘에선 박완수 현 도지사, 민주당에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꼽힌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인 이해민 의원이 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과 관련한 당의 입장과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

9일까지 모집…후보자 자격검증 위한 소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공모한다.

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하려면 당적을 보유하고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이어야 하며,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다.

공관위는 또 예비후보자 공모 기간 이후 출마를 결정한 예비후보자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예비후보자 등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검증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수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봉건우·전형호·주나나 위원이 참여한다.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기구 구성도 의결됐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천을 관리하기 위해 회의·심사 기록 보존, 기록의 열람 및 폐기 등에 대한 운영 규칙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공관위는 중앙당 및 시·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등록 자격을 취득한 예비후보자가 공관위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후보자가 제출한 인적 사항과 경력, 의정활동계획서·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예타 대상 선정

사업 차질없도록 준비 철저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조 20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은 오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나주시 왕곡면 일대 부지(103만㎡)에 국비 1조 2000억원을 들여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구현을 위한 7대 개발사업과 핵심기술 실증을 위한 연구실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앞서, 한국연구재단은 지난해 11월 가칭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인공태양 연구시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전남을 선정한 바 있다.

전남도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로 핵융합 연구를 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000여명의 국내외 석학들의 전남 유입과 2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1만 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데 따라 나주시, 켄텍과 구축한 ‘원팀’ 협력체계를 통해 오는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사업 추진을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전남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혁신당 합당 논쟁 격화…내부 갈등 확산

한준호, 합당 제안 철회 촉구

이해민 “밀약설은 악의적 프레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안팎에서 합당 관련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한준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달라”면서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합당이 전국적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지표는 무엇인지, 후보연대·정책연대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이 있음에도 왜 반드시 합당이어야 하는지,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등 질문에 당이 함께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 대표 측 인사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 대표의 제안은 양당 통합을 결정한 게 아니라 당원들과 함께 공론화의 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 대표의 제안은) 이제 통합논의를 전 당원과 함께 시작해보자는 것”이라며 “(합당은) 전 당원의 참여와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해민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사전 밀약설은 존재하지 않는 음모론이다. 양당은 한 번도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실무 협의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 ‘밀약’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일갈했다.

‘혁신당 부채 400억원설’에 대해서도 “지지율 하락이나 재정 위기 등의 이유로 합당을 구걸한다는 비방 역시 매우 모욕적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